민주 "사고 수습에 총력"… 정부 책임론 '솔솔'

참사대책본부 본격 활동…술자리 가진 서영석 의원 감찰 진행
강원도청 방문·정치탄압대책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는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조기 수습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하면서 당국 책임론을 지적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서영석(경기 부천정)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등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모두 검은색 양복 차림에 가슴 왼편에 '추모' 리본을 달았다.

회의장에는 여당 공세 발언 대신 "힘을 모읍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뒷걸개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정을 모두 순연했다.

당내 '김진태발(發) 경제위기 진상조사단'의 강원도청 방문과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는 잠정 보류됐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감사원법 개정안과 대장동 특검법의 당론 발의 역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3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도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는 순연하고,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만 예정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여야 공동 대책기구 제안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초당적 협력·정쟁성 일정 보류'의 기조 속에서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 당국은 '나는 책임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도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예년만큼만 대응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용산구청·서울시·경찰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서영석 의원은 경기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열린 당원 교육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어 시의원·당원 수십 명과 함께 족구를 한 뒤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술자리를 가진 뒤 경기 포천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날 SNS를 통해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당 공보국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리감찰단은 해당 술자리에 관해 조사하고, 서 의원의 소명을 듣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법적책임은 누구? 난감한 경찰

"밀어" 외친 시민·가드 세워 피해 키운 업소 직원, 형사 처벌 미지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고의 법적 책임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사고 현장의 일부 목격자들이 대열 뒤편에 있던 일부 시민이나 인근 업소 직원이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용산구청과 경찰 등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지난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SNS에서는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오르막 쪽에 있던 일부 시민이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사고가 기록된 현장 동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앞 사람을 밀어 대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뒤엉키는 연쇄작용이 일어났다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사람들이 뒤엉켜 인명피해까지 나는 상황을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사고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앞 사람을 민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폭행으로 평가되는 만큼 과실 아닌 폭행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밀어'라고 외쳤다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인명피해와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로 앞 사람을 민 행위와 대열의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바닥에 깔린 결과 사이의 여러 단계 인과관계를 하나씩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뒤엉킨 대열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골목 안 가게로 몸을 피하려 하자 가게를 지키는 이른바 '가드'들이 출입을 막았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이를 두고 압사 직전 상태인 이들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으로 다시 내몬 가드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도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에게 '구조하지 않은 행위' 자체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국회에서 몇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이 폭 3.2m에 불과하고 경사도가 10%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골목길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비롯한 불법 정황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들의 불법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참사의 책임 규명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가 된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골목길을 정비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성수대교 사건 때도 부실 공사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됐는데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됐었다"면서 "증거 수집과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감, 8일로 연기

여야, 운영위 합의…국가인권위·국회 사무처 국감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3일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인 8일로 연기됐다.

운영위 여야 간사이자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31일 전화 협의를 통해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일정을 이같이 미루기로 합의했다.

8일 운영위의 국감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3곳이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처럼 합의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의 사고 수습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연기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화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니, 사고 수습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운영위는 대통령실 국감 다음날인 9일에는 국회 사무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애초 2일로 예정된 국회 사무처 및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은 일정 변동 없이 열린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의 1일 777사령부 및 육군특수전사령부 현장 시찰 일정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취소됐다.

/연합뉴스